

투자·자본시장

손해액의 60~70%, 판매가 아니라 운용을 문제 삼은 조정결정

설명의무가 아니라 운용 단계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판단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채권형 랩 조정결정과 자본시장법 조문을 대조해 판매 단계의 의무와 운용 단계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분리했습니다.

발행

2026.08.19

연번

2026_41

읽는 시간

6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결정의 핵심을 배상비율이 아니라 판단 대상에서 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는 계약을 맺는 시점의 행위를 규율한다. 이번 결정이 판단한 것은 계약을 맺은 뒤의 운용 단계이고, 그 기록은 회사 안에 있어 투자자가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

확정된 사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6월 29일 채권형 랩어카운트 운용 관련 2건에 대해 신청인별 손해액의 60%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결정일	2026년 6월 2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	손해액의 60%·70%	신청인별 결정
시장 상황	2022년 레고랜드 사태	금리 급등·채권가격 하락
문제 행위	고금리 CP·채권 편입	만기 불일치 포함
판단 의무	선관주의·충실의무	계약 뒤 운용 단계
의미	첫 조정결정	투자일임 운용의무 판단

조정위는 약정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높은 CP·채권을 편입하고 고객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자산을 운용한 점 등을 판단했습니다.

배상비율은 모든 채권형 랩 고객에게 자동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두 신청인의 계약·운용·손해 사정을 반영한 조정안입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는 금융상품을 권유·계약하는 시점의 고객정보 파악과 중요사항 설명을 규율합니다. 이번 결정의 중심은 그 뒤 투자일임업자가 실제로 자산을 어떻게 골라 운용했는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96조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둡니다. 제98조는 투자자 사이의 이익을 해치거나 특정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운용 종목·가격·만기·대체거래 기록은 회사 내부에 있습니다. 고객은 손실이 난 뒤에도 시장위험과 운용상 의무 위반을 스스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자료열람과 분쟁조정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효력이 생기려면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상 수락기간 안에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손해액이 1,00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배상비율 60%는 600만원, 70%는 700만원입니다. 실제 손해액과 과실상계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다른 고객은 같은 상품명만으로 같은 비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계좌의 투자일임계약, 운용보고서, 종목·만기와 거래내역을 확보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손해액	1,000만원	가정
60% 배상	600만원	단순 계산
70% 배상	700만원	단순 계산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당사자 수락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실제 수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유사 고객 범위 같은 채권형 랩이라도 운용기간·편입자산·설명과 손해가 달라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운용기록 접근 고객이 비교에 필요한 거래·만기·유동성 관리 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열람할 수 있는지가 남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조정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의무 위반·인과관계·과실을 다시 판단합니다.

지금 할 일

- 국민
- 투자일임계약서, 제안서, 운용보고서와 손실 발생 전후 거래내역을 보존합니다.
 - 판매 당시 설명만이 아니라 실제 편입 종목의 신용도·만기와 계약기간의 불일치를 표로 정리합니다.
 - 회사 민원 뒤 자료열람요구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 대상회사
- 약정수익률 추구가 고객별 투자목적·기간과 충돌하지 않는지 운용 전후 기록을 남깁니다.
 - 만기 불일치·유동성 위험과 계좌 간 거래의 사유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로 제공합니다.

- 당국
- 조정결정의 사실관계와 판단기준을 비식별화해 유사 피해자가 자기 사안을 비교할 수 있게 공개합니다.
 - 자료열람 범위와 처리기간을 점검해 운용기록의 정보 비대칭을 줄입니다.

· 당사자의 수락 여부와 금융회사의 유사 계좌 자체 점검·배상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

유사계좌 자율조정

B

개별 분쟁 지속

· 금융회사의 수락 공시, 유사 계좌 검사결과와 금융감독원의 후속 분쟁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금융제도 금융분쟁조정제도

금융제도 설명의무

피해구제 자료열람요구권

피해구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확인한 사실·숫자 5건

5 확인 항목	4 1차 자료	1 파생 계산	6개월 뒤 추적 예정
------------	------------	------------	----------------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파생 1차 자료의 수치를 이용한 계산

01	1차	채권형 랩 운용상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액의 60~7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2026년 6월 30일 발표	원문 열기 ↗
02	1차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자본시장법 제96조	원문 열기 ↗
03	1차	투자자 이익을 해치는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자본시장법 제98조	원문 열기 ↗
04	1차	금융분쟁조정 신청·수락의 법적 효력 금융소비자보호법	원문 열기 ↗
05	파생	손해액 1,000만원 가정 시 60%는 600만원, 70%는 700만원 1,000만원 × 60% · 70%	계산식

추적 예정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여부, 금융회사의 유사 계좌 자체 점검과 후속 배상기준을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공개 연번을 실제 게시 순서에 맞춰 NB-2026-041로 바로잡고, 배상비율을 일반 기준이 아닌 두 신청인의 조정결과로 한정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연구소의 분석이며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배상 여부와 비율은 계약·운용·손해·과실에 따라 달라지며 투자 또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